

韓 성장률 OECD 7위 5분기 만에 日 넘어서 저성장 탈출은 '아직'

2분기 GDP 0.7% 상승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았다. 한국은 일본 수치도 넘어섰는데 이 역시 5분기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직전 분기 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탓에 아직 회복 국면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와 비교해 0.7% 증가했다. 37개국(38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미발표) 가운데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2분기 OECD 37개국 평균 0.4% 1차추경 집행, 2분기 반등 이끌어

1분기 -0.2% 기저효과도 반영 2차추경 투입 등 3분기도 기대

지난 2분기 37개국 평균은 +0.4%였고 일본 GDP는 0.5% 늘었다. 한국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OECD 평균과 일본 성장률에 못 미쳤다. 국내 민간소비·투자 위축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그러다 올해 2분기 들어 크게 반등하며 OECD 및 일본 수치를 5개 분기 만에 상회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0.8%)에는 다시 또 뒤졌다.

한국 위로는 6개국이 지리했다. 튀르키예(+1.6%), 덴마크(+1.3%), 코스타리카(+1.2%), 노르웨이·미국·폴란드(+0.8%)다. 또 스페인·슬로베니아(+0.7%)가 한국과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2분기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3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회·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처럼 주요국 비교에서 상위권에 속했으나 올해 1분기에 GDP(-0.2%)가 후퇴한 데 따라 2분기에 기저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보다 앞선 작년

4분기(+0.1%), 3분기(+0.1%), 2분기(-0.2%)에도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을 한 바 있다. 이에 본격 회복세라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올해 3분기 수치를 대한 기대감은 크다. 정부가 각 분야에 2차 추경을 투입 중인 것은 물론,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심리 되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단, 미국발 관세 여파 등은 수출·성장률에 중대한 관건이다.

2분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한국 경제엔 저성장이 추세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추세 극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쏟아지는 국내외 지표들은 녹록치 않다.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조만간 앞지를 것이라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에 밀릴 것이라 추산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명목GDP 성장률 예측과 이달 대만 통계청이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에 따른 계산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우선 지난해 명목GDP 1조8746억 달러에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3.2%)를 대입해 올해 명목GDP 전망치(1조9345억 달러)를 산출한다. 이를 올해 기준 인구(5169만 명)로 나누면 3만7430달러이다.

반면,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GDP는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무려 8.01% 증가했다. 22년 전인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래로 재역전이 현실로 다가왔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해 2%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테크 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車·반도체·배터리 등 美 점유율 하락 우려

>> 1면 '韓·美 관세협상...'서 계속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대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

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 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상반기 25% 급등... 압구정 재건축 본격화

4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2구역은 14개동, 2571세대 예정

서울 강남 최대어인 압구정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다.

압구정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5% 넘게 급등, 토지거래허가와 대출 등 각종 규제에도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의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을 고시했다.

압구정 4구역은 현대 8차와 한양 3·4·6차로 총 1341세대 규모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최고 70층 안팎, 9개 동 1664가구로 재탄생한다. 4구역 조합은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규모가 1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부분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과 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안상미 기자

군, 상권 모두 뛰어나 강남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속도는 시공사 선정에 나선 2구역이 가장 빠르다. 신현대 9·11·12차인 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14개 동, 2571세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준공 50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은 급등세다. 특히 지난해 2~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이 지나 매매가 가능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압구정의 매매가격은 25.8%나 급등해 대치

(18.1%)나 반포(8%)를 크게 앞질렀다.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침체기에도 압구정의 하락폭은 0.7%에 그쳤고, 2023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단지별로는 50평대의 경우 압구정 3구역에서 현대 1, 2차 52평이 98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2구역에서도 신현대 51평이 90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5구역에서는 실거래가 모두 80억원 이상에서 이뤄졌고, 최근 호가는 100억원을 웃돌고 있다. 30평대로는 속도가 빠른 신현대가 75억원으로 지난 7월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한강 조망과 대규모 단지, 초고층 브랜드 신축 기대 등 미래 주거 트렌드 뿐만 아니라 교통, 공원, 상업·집객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압구정의 입지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대지지분 정리 등 이슈로 인해 사업 장기화 여부가 시장 기대심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재건축 동력이 더욱 강화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해커, 피해자의 '상세 개인정보' 확보 가능성 커

KT 소액결제 해킹 의문점

'피해자 명의' 티머니 카드 충전금 전액 이득 얻을 수 없는 구조 '비효율 범죄' 저지른 이유 의문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가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IMSI)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팜토셀)을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범행 수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핵심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11일 오후 시 기준 총 9만2034건에 달한다. 또 KT는 황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의문 1. 범인은 어떻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나

경찰과 KT에 따르면, 해커는 탈취한 정보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같은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발견된다.

◇이득 없는 티머니 충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티머니를 충전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적이다. 즉, 해커는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준 셈이 된다. 해커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기엔 매우 번거로운 방식이다.

◇엇갈리는 설명: KT 측은 “실제 몰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부장, 김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부장. /손진영 기자 son@

품 구매 등 (해커가) 돈을 쓴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커가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해커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현금화했다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특정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의문 2. 불법 기지국만으로 소액결제 가능할까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 식별정보인 IMSI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팜토셀을 싣고 다니며 특정 지역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채는 ‘워 드라이빙’ 수법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액결제 전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추가 개인정보의 필요성: 소액결제를 완료하려면 IMSI 정보 외에도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불법 기지국은 통신 트래픽을 가로챌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

◇또 다른 정보 유출 가능성: 이는 해

커가 팜토셀 해킹과는 별개의 경로로 이미 피해자들의 상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범인이 추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 KT 내부나 혹은 제3의 경로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의문 3. 왜 KT만 표적이 되었나

유독 KT 고객들에게서만 피해가 집중된 이유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안 투자 약속 무색: KT는 불과 두 달 전 “정보보호 분야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 초기에는 단순 ‘스미싱’으로 판단하는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KT만의 취약점 존재?: 해킹 수법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KT 통신망의 특정 취약점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법인지는 미지수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도 “왜 KT만 당했는지 답을 내놓기 어렵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